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단독]전국서 투표용지 4726장 모자랐다…100장 넘게 부족한 17곳 모두 서울	정치	
2	대기업 성과급에…상위 10% 월소득 1500만원 첫 돌파	경제	
3	신석기 고래사냥 흔적 '작살촉' 국가민속문화유산 된다	문화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선거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총 4726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곳은 17곳인데, 전부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발생 투표소 현황' 자료에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한 67개 투표소의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 당초 배정한 투표용지 수와 추가 배부한 투표용지 수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50곳은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했고, 17곳은 투표용지가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물량을 배부한 곳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였다. 본투표일 1836명이 이 투표소에서 투표했는데, 당초 이곳에 배정된 투표용지는 1400장에 불과했다. 436장이 부족했다는 것. 이날 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 4명 중 1명(23.75%)은 당초 배부된 투표용지가 아니라 추가로 공수된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뜻이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에서 383장, 광진구 구의3동 6투표소에서 278장, 성북구 장위1동 6투표소에서 277장이 각각 부족했다.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연장되는 등 특히 혼란이 컸던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도 179장이 모자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17곳이었는데,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각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배분할 때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율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본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적은 물량을 배정하고, 반대인 곳은 높은 본투표율을 예상해 비교적 많은 물량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배분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11.01%로 전국 평균(23.51%)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본투표 참여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 투표소에 배정된 투표용지는 본투표 대상자(4074명)의 절반 수준(51.55%)인 2100장에 불과했다. 부족 매수가 가장 많았던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 역시 본투표 대상자는 2612명이었지만, 당초 배정된 투표용지는 53.60%인 1400장뿐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실무 착오가 아닌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며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배분과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 역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기사/뉴스요약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1500만 원을 넘어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과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반면 저소득층 소득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중산층도 제자리걸음을 해 양극화가 심해졌다.

8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538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 상위 10% 가구 소득이 월 15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반면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 소득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1분위 가계소득(73만7000원)은 1년 전보다 0.9% 줄면서 2024년 1분기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득 5분위 평균 소득을 1분위 평균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20.9배로 전년(19.9배)보다 확대됐다. 배율이 크면 클수록 소득 불평등 지표가 나빠졌다는 뜻인데, 2023년 1분기(21.4배) 이후 3년 만에 다시 20배를 넘어섰다

중산층은 정체를 겪고 있다. 소득 6분위(0.9%)와 5분위(1.5%), 4분위(1.6%)의 소득 증기율은 모두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밑돌았다.

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더 높았다”며 “1분기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이 대기업 위주로 지급된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출과 기업 실적 개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할 경우 소득 양극화가 심화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성과로 한국 경제 거시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업종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며 “소득과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성장의 과실이 보다 폭넓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 기사/뉴스요약

선사시대 한반도의 고래잡이 역사를 품은 작살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이 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울산박물관에 소장된 신석기시대 문화유산인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 예고된 대상에는 2010년 발굴조사에서 고래 꼬리뼈에 박힌 채로 발견된 작살촉과 어깨뼈에 박혀 있던 작살촉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기원전 4000~3000년경 것으로 추정된다.

두 작살촉은 사냥감의 뼈에 박힌 상태로 발굴된 희귀한 사례로 꼽힌다. 유산청은 “신석기시대 한반도인의 생활문화와 생업기술, 도구 제작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며 “고래잡이 과정 등이 새겨진 울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와도 관련 깊다”고 설명했다.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은 예고 기간 3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뒤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료된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단독]선관위 투표지 인쇄 감축, 회의도 안하고 지침 하달했다	정치	
2	“하이브 인력사무소냐”…BTS 부산 공연에 공무원 대규모 투입 논란	사회	
3	반도체값 폭등에 美기업들 아우성…韓 공급업체 압박 우려도	경제	

[1]기사/뉴스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송 의원에게 설명했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

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람에는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인의 본투표율은 50%를 넘었지만, 편람상 하한선을 일괄 적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는 실제 인쇄를 하한선인 50%에 맞추게 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예상 선거인 수 대비 인쇄 매수를 결정하는 건 각 지역 선관위”라는 입장인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지침과 과거 투표율을 고려해 인쇄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편람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또 편람에 “(인쇄 매수는)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서 산정해 사무처장이나 사무국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실제 인쇄량을 50%로 확정된 것은 송파구 등 지역 선관위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파구선관위는 편람에 앞서 하달된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역 선관위 모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잠실4동의 전체 선거인 수 대비 본투표율은 각각 55.23%와 51.45%였고, 잠실7동은 59.56%와 51.40%로 두 차례 연속 50%를 웃돌았다. 두 동은 모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지역이다.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하한선인 50%를 일괄 적용하지 말고 투표구별로 조정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투표율이 50%를 넘었던 지역에 최소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2)기사/뉴스요약

오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앞두고 부산시가 공무원 인력 투입 방식을 자율 신청제로 전환했다. 민간 기업이 주최하는 유료 공연에 대규모 행정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과 노조 반발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논란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에서 시작됐다. 직장 정보가 '공무원'으로 표시된 작성자 A 씨는 "하이브가 수익을 내기 위해 개최하는 상업 콘서트에 부산시청 공무원 915명이 차출돼야 하는 상황이 맞느냐"며 "그것도 근무시간에 공짜로 차출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부산지부 인력사무소"라고 비꼬았다.

게시글에는 "하이브가 부담해야 할 용역비를 지방정부 예산으로 대신하는 것이냐", "광화문 공연은 무료였지만 이번 공연은 유료인데 공무원을 이렇게 동원해도 되는 것이냐", "수익을 내는 행사라면 안전 대책도 주최 측이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은 온라인을 넘어 노동조합 차원의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은 '민간공연 강제 인력 차출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뒤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시는 8일 오후 2시 강제 차출 방침을 철회하고 자율 신청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부족한 인력은 노조 간부 등이 행사 지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행사 참여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인력 규모와 세부 배치 계획은 9일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5일 공연 기간 시청과 구·군, 경찰·소방,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기관 인력을 공연장과 도시철도 역사, 주요 이동 동선 등 혼잡이 예상되는 지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인력은 인파 밀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람객 분산 유도, 위험 상황 신고 및 초동 대응, 교통 통제,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단속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기관별 대응 상황을 관리하고, 오는 10일에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3)기사/뉴스요약

메모리 반도체가 인공지능(AI)발 수요 폭발로 역대급 품귀를 빚는 가운데 지나친 가격 상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공급 업체에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악의 경우 국가 차원의 규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최근 6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내고 “지난 1년간 메모리 가격이 6배 급등했는데 이는 거시경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 △기업 마진 축소 △투자 지출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가전, PC,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업체들이 비용 상승을 감수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미국에서는 여러 경제 산업 단체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자동차혁신연합, 인터넷·TV 협회(NCTA), 통신산업협회 등 9개 단체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반도체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엔 미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서라도 미국에 메모리 공급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이들 단체는 “메모리 칩 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이 미국 국민들의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중”이라며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1년 전 세계에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일어났을 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에게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공급망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거센 반발을 사면서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력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이 올해 역대급 한파를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올해 스마트폰 시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곳은 2월에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2.4%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6월에는 감소폭을 13.9%까지 키웠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메모리 공급 위기와 이란 전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스마트폰 시장이 사상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전세계 PC 출하량이 11.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 4분기(10~12월)에는 상황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IDC는 “전 세계 PC 시장은 하반기(7~12월) 격동의 시기를 맞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메모리 부족으로 PC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PC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5월 기준 국내 데스크톱PC 평균 구매가는 146만 원으로 전년 동기(96만 원) 대비 50% 가량 올랐다.

메모리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 현상이 계속되면서 후발 주자들도 기회를 얻고 있다.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다. 글로벌 메모리 업계에서 최하위 기업으로 꼽히는 대만 난야 테크놀로지도 올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메모리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2, 3티어 제조사들의 수익도 같이 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체급을 키워 주고 일부 시장에선 점유율을 내주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한동훈 복당, 최소 1년은 지켜봐야”...원내대표 후보들 신중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조기 입당 시킬 의지가 없고 최소 1년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주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당 쇄신 방향과 지도부 거취, 한 의원 복당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 정 의원, 성 의원은 한 의원의 복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대표 박상웅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 후보) 세 분 모두 밖에 있는 한 의원을 조기 입당시키려는 의지는 아무도 없다고 확인했다”며 “최소 1년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분 다 성급하게 (한 의원의) 입당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사가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에 적응한 이후에 1~2년 여유롭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 부분은 당분간 이슈화될 수 없다고 후보자들이 명확하게 말씀했다”고 강조했다. 재선 대표 엄태영 의원도 “한 의원이 배지를 달았고, 당대표 경력이 있지만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는지 원내에서 체험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며 “당장 한동훈 복당이 어찌니 이런 얘기들은 한 의원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민심이나 당심이나 선거를 통해 얻은 여러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급진적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세 분 후보자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세분 모두 당내 현실과 당 변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건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급진적 방향의 당 지도부 교체, 한 의원 거취 결론은 시간을 갖고 논하되 뭔가 좀 명예롭게 서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세 분 다 의견이 같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장 대표 퇴진론에 대해 “그 부분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지,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에도 맞지 않고 정치 환경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조금 긴 호흡으로 명예롭게 어떤 결단을 내리면 내렸지, 무리수를 뒤서 촉박하게 뭘 요구하는 듯한 것은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8월이면 임기가 종료되지 않나”라며 “임기를 단축해 물러나는 것에 대해 좀 더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지도부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게 지도부가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지 않나”라며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우리가 바로 잡고 해야 하는데, 당내 권력 문제에 대해 골몰하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했다”고도 말했다. 엄 의원 역시 “지도부 교체와 관련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을 가지고 명예롭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도부 교체와 당내 쇄신을 만들어가겠다는 게 후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 중 한 분이 당 지도부에 대한 교체와 책임을 묻더라도 과거 우리가 이준석 대표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것이 있다고 했다”며 “대표 본인도 물러날 때 명분이 있고 모양새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걸 감안해서 하신 말씀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최태원 “새 공장 한국에 짓지 않을수도”... 金총리 “韓서 되게 해야”	정치	
2	5시간 부분파업 카카오 노조 “29일엔 총파업”	경제	
3	잠실7동 투표소에 용지 보관상자 없었다...“이미 치운 듯”	사회	

[1]기사/뉴스요약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일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해외라도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다음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를 비판했다. 김 총리는 “‘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할 것인가’ 노력해야 한다”며 최 회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10일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엑스(X·구 트위터)에 “용인 다음도 준비해야...韓서 안되면 해외 반도체 투자도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최 회장이 일본 출장 일정에서 한 발언을 다룬 기사였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에서 안 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할 것인가’를 갖고 기업과 정부, 정치가 성심성의껏 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공장 입지 관련 질문을 받고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추가 공장 건설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해외에 SK하이닉스 공장을 추가로 지을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해외라도 가야 하는 상황 아니냐”며 “‘무조건 한국에만 짓겠다’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시장이 그 다음에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재계 총수 초청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 관련 국내 투자 계획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를 앞두고 주요 그룹 총수가 해외 공장 건설 가능성을 언급하고, 현직 국무총리는 국내 건설을 압박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서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기사/뉴스요약

카카오 노조가 10일 카카오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29일에도 추가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뿐 아니라 계열사인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노조도 동참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본사 조합원 약 1000명을 포함한 1500여 명이다.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들은 ‘고용안정 쟁취! 무책임한 경영진 퇴진!’, ‘카카오 파업 승리로 공동교섭 쟁취하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해당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29일 출근해서 일하지 않는 ‘로그오프’ 쟁의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2차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 수준인 약 1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과 함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RSU를 포함한 성과 보상 재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파업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IT업계 특성상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주요 시스템도 자동화돼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서비스 안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이다.

(3)기사/뉴스요약

법원이 10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했지만 증거물 확보에 실패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 대상 물품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 5분경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한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동부지법·선관위 관계자 등이 함께 들어갔다.

그러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소는 이미 이전의 경로당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 어떤 증거물 확보했나’, ‘투표용지 보관상자 확보하셨나’, ‘오늘 현장 검증 어떤 내용 진행됐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빠져나왔다.

김 전 후보는 현장 검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투표 용지가 담겨 있던 박스를 확인하는 것을 하기 위해 들어갔고, 박스는 없었다. 이미 다 치워서 확인을 못했다. 다른 주변에 뭐가 있나 돌아보고 추후 어떻게 진행할 지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선관위 입장에서선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가 버렸다는 취지인 것 같다.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은 없다. 현장은 이미 다 치워졌고, 선관위에서도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다. 보관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정확히 하라고 했다. 답변 받고 추가 증거보전 신청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 검증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후보는 추가보전 신청 여부는 선관위 측 사실조회 답변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후보는 “선관위의 존립이 달려 있는 부분이니 (사실조회 신청)과 관련해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최대한 빠르게 답변하겠다는 말은 들었다”면서도 “언제 올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법원은 전날 김 전 후보가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전 대상은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 촬영 폐쇄회로(CC)TV 등 4건이었다.

이번 증거 보전은 김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정청래 “대한민국은 이재명 보유국…존재 자체가 국가 경쟁력”	정치	
2	트럼프 “오늘밤 이란 강하게 타격…베네수엘라처럼 석유 차지”	국제	
3	20대 女소방관 음주 강요 사망 의혹,李 지시로 국조실이 조사	사회	

[1]기사/뉴스요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 대통령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고도 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으로 친명계(친 이재명계)의 반발을 산 지 하루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역량과 성과로 이제 대한민국은 G7(주요 7개국)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께서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 보유국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년은 대한민국의 저력과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코스피는 장중 8000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고 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중동 전쟁, 전 세계가 위기인데 왜 한국의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는가’라고 물은 적이 있다”며 “구 부총리는 ‘전쟁 위기 속에서는 자본이 항상 어디로 투자할 지를 찾게 되는데, 이 대통령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 코스피가 흔들리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했는데, 그 평가가 맞는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는 국정 속도를 2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앞으로 남은 4년을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고 하셨다”며 “이 대통령의 각오와 같이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책임감과 절박감으로 민주당은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전날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9일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 당시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로 분류된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석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해석이 분분했다.

정 대표는 “야당이 야당다울 때 지지하고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 왔다”며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곧 하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상 국민의 마음,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라고 덧붙였다.

2)기사/뉴스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사흘째 대(對)이란 공격을 예고했다. 이어 “머지 않은 미래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하르그섬과 다른 석유 인프라를 장악해 이란의 석유 및 가스 시장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미 정권을 수립해 석유 시장을 차지한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방식이 될거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10일 이란을 겨냥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9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를 “잔인하고, 폭력적인 공격”이라고 표현하며 공습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이란이 미국의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내일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놓고 이란과의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이날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 중동에 위치한 미군 기지 18곳을 공격하며 대응에 나섰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 이어가자 4월 8일부터 이어져 온 휴전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군의 10일 공습은 8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가 이란군에 의해 격추된 데 따른 보복 공격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미군의 9일 1차 보복 공습 후에도 이란이 바레인 주둔 미 해군 5함대를 겨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X에 “이란 전역에 걸쳐 군사 감시 능력, 통신 시스템, 방공 시설 등을 겨냥해 공격을 실시했다”며 “미 해병대와 공군, 해군 전력이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해 미군과 국제 상선에 위협이 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 발전소나 교량을 공격하는 방안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11일에는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를 담당하는 하르그섬 장악을 언급한 건 핵심 경제 인프라까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은 3월에도 하르그섬의 군사 시설을 공격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다만 하르그섬 장악에는 지상군 투입 등이 필요해 미군 피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단 분석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7, 8일 상대방 본토를 직접 공격하며, 긴장을 고조시키자 “즉각 총질을 중단하라”며 양국을 공개 압박했다. 또 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빠르면 8일, 늦어도 10일경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과 비판이 커진 만큼, 빠른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렇던 그가 다시 강경한 군사 카드를 검토하는 건 외교적 수단만으론 당장 MOU 체결 등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란은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협상 교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3)기사/뉴스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난해 광주 소방안전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음주 강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20대 여성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소방청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리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목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지시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음주 강요, 유가족의 감찰 조사요구 목살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여성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이 약혼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게 사망 원인이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약혼자는 이에 반발해 생전 음주 강요로 힘들어 했다는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을 하지 않다가 유족이 소방청을 방문하자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송평인 칼럼]대통령의 아는 체와 모르는 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지방선거일 투표를 독려한다며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低質)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플라톤은 그런 말도, 그런 취지의 말도 한 적이 없다.

그는 2024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자신의 모교인 중앙대를 찾아 학생들 앞에서 ‘정치에 무관심한 자는 가장 저질인 인간에게 지배당한다’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소개했다가 반나절 지나 플라톤의 말로 정정한 바 있는데 실은 플라톤의 말도 아닌 것이다.

플라톤이 ‘국가’에서 한 말은 “훌륭한 사람이 통치를 거절할 경우 받게 될 가장 큰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통치받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플라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통치하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오늘날 정치인들이 명예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플라톤은 명예욕마저도 좋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통치를 거절할 경우 통치를 맡기려면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게 벌(penalty)이다. 그러면서 벌 중의 가장 큰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the worse)에게 통치받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걸 벌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겠다. 플라톤이 “오늘날에는 서로 자기가 통치하겠다고 싸우지만”이라고 쓴 것을 보면 플라톤 시대에도 그런 훌륭한 통치자는 이데아적인 세계에나 있다. 그런 통치자가 바로 철인(哲人)이다.

우리가 플라톤을 통해 소크라테스에게 배운 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태도의 중요성이다. 대통령이 학자 출신도 아닌데 굳이 플라톤을 인용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필요하지도 않은, 그것도 엉터리 인용을, 그것도 두 번 세 번 하면서 선거 당일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분열적인 투표 독려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냈다.

프랑스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건 지난달 4일 우리 화물선이 공격받은 날로부터 하루쯤 뒤다. 당시 엘리제궁 대변인은 “프랑스가 공격을 받은 건 아니다”라며 화물선이 몰타 국적기를 달고 있었고 모든 선원이 필리핀인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나무호는 파나마 국적기를 달긴 했지만 선원 중 6명은 한국인이었으므로 프랑스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한국이 공격받은 것이다.

당시 프랑스 선사인 CMA CGM은 사건 직후 직접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엘리제궁도 피격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국 선사인 HMM은 어떤 발표도 직접 하지 않았다. 못 했을 것이다. 그 대신 정부를 통해 “폭발이 있었다”는 발표가 나왔다. 옛새가 지나 이뤄진 폭발 원인에 대한 발표도 선사가 아니라 정부가 했다. ‘공격이 있었다’는 뒤늦게 당연한 발표였다.

프랑스에서는 사고 직후 이란 순항미사일이 프랑스 화물선을 공격했다는 미국 방송 보도가 있었을 뿐이지만 공격 주체가 이란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우리 화물선에 대해서는 미국 방송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는데도 정부는 미국 쪽에 더 알아보기는커녕 비행체 잔해를 직접 조사한다며 들어왔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달 27일야마 비로소 이란 대함미사일에 의한 피격이라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혁명수비대에 의한 것인지 민병대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엇그제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또 다른 사족을 붙였다. 미군처럼 그 지역에 정찰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알겠으며 반대로 미군처럼 그 지역에 정찰 자산을 갖고 있지 않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모르겠나.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노태약, 선거前 3개월간 34일만 출근... 근무한 날 절반은 4시간 이하 머물러	사회	
2	李대통령 지지율 57%...4개월만에 60% 밀돌아	정치	
3	11일만에 또...SK하닉 청주공장 화재, 4000명 대피-8명 병원 이송	경제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오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한 조짐이 있었음에도 허둥지둥하며 제때 대응하지 못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또 지방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이 있는 노태약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직전 3개월간 법정 근무일 60일 중 출근한 날이 절반가량인 34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3차 회의를 갖고 본투표 당일인 3일 송파구 선관위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조짐이 처음 보고된 건 이날 오전 11시 50분 구 선관위 직원이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확인하고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 준비를 요청하면서다. 서울시 선관위는 오전 11시 56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하며 투표용지 추가 배분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오후 들어 관내 투표소들에서 추가 투표용지 요청이 속출하며 현장은 혼돈에 빠졌다. 투표용지를 배분해야 할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일련번호 부여 작업에 투입되면서 배송 체계가 마비된 것.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가정한 매뉴얼은 없었고, 직원들은 일련번호 부여 장비 사용법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여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중앙선관위 등 상급 기관에 상황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오후 4시 30분부터는 사회복무요원까지 배송에 투입됐고, 투표소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관위 사무실로 투표용지를 받으러 가는 상황도 벌어졌다.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은 투표소 현장에서 수기로 이뤄졌고, 배부 시 서류 작성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관내 투표소 15곳에서 최장 105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상급 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했고 신속한 보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태약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3월 3일부터 선거일(3일)까지 법정 근무일 60일 중 선관위 업무를 본 날은 34일(57%)이었다. 출근하지 않은 날 중 3일은 행사 참석, 언론사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출근한 날도 청사에 머문 시간이 반나절(4시간) 이하인 경우가 15차례였다. 통상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근직이지만, 노 전 위원장은 3월 3일자로 대법관을 퇴임한 상황이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2일 노 전 위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합수본은 조만간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2) 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 이후 첫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7%로 3주 전보다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9~11일 조사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57%로 집계됐다. 지난달 22일 공개됐던 직전 여론조사 국정지지율(64%)보다 7%포인트 낮아진 것. 부정 평가도 같은 기간 28%에서 35%로 올랐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60%를 밑돌기는 4개월 만”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를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1%, 국민의힘 29%를 기록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3주 전 23%포인트 차에서 12%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각으로는 응답자의 67%가 ‘참정권 침해’, 25%가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답했다. 전면 재선거에 대해선 찬성 44%, 반대 48%로 팽팽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9%로 3개월 전 조사 때보다 8%포인트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한동훈 의원(8%),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7%), 김민석 국무총리(5%) 등 순이었다.

3) 기사/뉴스요약

12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달 1일 불소 누출을 동반한 화재 사고 이후 11일 만에 또 벌어진 사고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내 M15X 2층 가스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작업자들에 의해 자체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직원 8명이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직원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이달 1일에도 사고가 있었다. 10여일 만에 반복된 사고에 공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시엔 M15 공장과 M15X 공장을 연결하는 6층 가스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1명이 가스 배관 캐비닛에서 누출된 불소에 노출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SK하이닉스는 이날 가스 관련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